



# 대전, 어떤 문화도시로 만들 것인가

김선미 | 닥트뉴스24 편집위원

## 01.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예술 자원

대한민국에서 '문화'가 이처럼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은 아마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다. 20세기도 문화의 세기라 일컬었으나 21세기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 세대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도 도시도 기업도 본격적으로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경제성, 생산성 못지않게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문화, 예술 자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발전을 앞세운 개발논리가 압도하고 있으나 문화를 들러리 개념으로만 여기던 시각에서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가 문화산업, 관광과 연계되며 각 도시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며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도시를 전제로 한 '창조도시' 원년을 선포하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를 지나치게 문화산업, 관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기조는 민선 5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화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겠다는 밑그림 없이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를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 부분이야말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낼 수 없으나 문화정책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대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본다.

## 02. 민선 5기 문화 관련 공약 및 과제

앞으로 4년간 대전시 시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민선 5기 핵심 공약 사업은 8대 분야 54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문화관련 공약은 '문화관광' 분야로 묶여 9개 과제가 선정됐다. ▶대전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 ▶첨단 영상 문화사업 및 컨벤션산업 육성 ▶대전 문화예술의 국제 브랜드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대중문화예술 육성 지원 ▶대청호 주변 녹색관광 벨트 조성 ▶균형발전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태권도 유소년 올림픽아드 개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다. 문화정책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기초문화예술 분야는 3개, 산업 관광이 3개, 체육분야가 3개 사업이다. 여기에 도시개발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문화적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중양로 재창조 사업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는 폭넓게 문화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중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으능정이거리 LED 영상거리 조성, 역세권 축진지구내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류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는 공공 공간의 색채계획,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마인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야다.

2011년 구체적 업무계획 중 문화예술, 관광분야를 보면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축제의 고도화로 경제성 제고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종무 및 전통

문화의 전승 보존 ▶시민의 접점에서 생활문화 공간 운영 등이 주요 계획으로 나와 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에는 시립예술단 국제 브랜드화 추진, 사랑티켓, 문화 바우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주요 업무로 꼽고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는 충남도청을 활용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국악 전용극장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도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국 예산은 시 일반회계 2조752억 원의 3.8%인 784억7천9백 만 원이다. 이중 체육 지원이 절반이 넘는 57.8%인 454억 원이고 문화부분은 31.7%인 249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관광산업과 중무문화재 부분이다.

### 03. 문화도시를 향한 과제 및 제언

#### 1. 비전과 철학이 있는 장기적 문화정책 수립

핵심 공약 사항이나 2011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볼 때 민선 5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 눈에 그려지지 않는다. 장기적 비전과 종합적 계획보다는 단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 문화정책을 살펴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비전과 철학을 담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문화계획이 없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어떤 가치 위에서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하는 방향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건축에 있어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원도심 활성화와 중앙로 재창조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또 시민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화를 향유토록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토대로 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장기 계획이 세워져도 문화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의 취향과 관심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며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눈에 띄는 외형적 업적 중심의 사업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결국 어느 지역에 무엇 무엇을 집어넣겠다는 과시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트렌드가 문화라니까 문화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전혀 문화적이 않은 시설이나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문화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 기반시설도 확장하고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도 해소하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대전시가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문화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2. 대전문화재단 위상 강화와 특성화

대전문화재단 설립은 옥상옥의 구조를 우려하는 일각의 반대도 있었으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러한 지역의 합의 아래 2009년 11월6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현재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과 사무처장 아래에 ▶운영지원팀 ▶정책기획팀 ▶문화사업팀 ▶전수시설운영팀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팀 등 1처5팀 20명으로 이뤄져 있다.

예산 규모는 2011년의 경우 대전시 출연금, 위탁사업비, 지정 기부금, 중앙정부의 기금을 비롯해 64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기금 규모는 출범 당초 조성된 89억2천만 원으로 기금이 1천억 원이 넘거나 한 해 예산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타 광역시도의 문화재단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기금과 예산 확보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문화가 미래와 희망을 만듭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로부터 이관된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레지던스프로그램, 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 등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단 설립 2년차로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심사의 투명성 제고,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대했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지역성을 담보로 한 민간영역의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특징적 변화는 아직 크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단의 위상,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대전문화재단에 주목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 문화재단이 갖는 상징성과 역할의 막중함 때문이다. 대전문화재단이 옥상옥의 구조가 아닌 대전문화의 브레인과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적 특성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재단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만으로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 사업이 됐든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한 것만으로는 곤란하다. 같은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성과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과 재정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문화재단은 자체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금의 이익금만 갖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재단 운영의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는 절대적 관건이다. 이는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과도 관련되는 사안이다.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의 신분제에 대한 안정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대전문화재단만의 특화 및 대표사업이 필요하다. 대전보다 뒤늦게 발족한 광주의 경우 다양한 시민 교육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인력, 문화농부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사업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전문화재단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실행이 절실하다. 넷째,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다. 문화예술교육은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며 확대되고 있는 문화영역이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의 이에 대한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방향 설정 등이 시급하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과거의 예능교육과 혼동하거나 전문가 투입이 없어 놀이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문화예술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재단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전문가 투입 등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의 인력 구성은 수적으로도 소규모이지만 장르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영역을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예술인들만의 전유물이 될 필요는 없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경계 허물기, 통섭의 시대이다. 인류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언론학 더 나아가 전공에 관계없이 열린 시각, 각 영역의 전문성과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창의적인 인재 영입이 절실하다.

### 3. 문화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문화정책의 가장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다.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다른 사업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남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기반시설의 확대는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전시 인구는 최근 들어 정체 상태다. 통계청의 인구 예측을 보면 대전시 인구가 갑작스레 늘어날 전망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시설투자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어만 놓고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 문화기반시설들이 넘쳐나며 재정적자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시설투자에 앞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별, 장르별 문화격차 해소다. 대전시는 지난 몇 해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 표 1 대전시 문화기반시설(2010.6)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계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소계	박물관	미술관	화랑	소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소계	문화원	전수회관	국악원
336	54	39	12	3	64	20	5	39	210	25	185	8	5	2	1

왔던 문화재와 국악 분야와 관련한 시설과 가장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인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확대됐다. 특히 지역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인 작은 도서관의 확충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최근 몇 해 동안 문을 연 문화기반시설을 보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요구가 큰 가운데 대전의 시립박물관인 ▶선사박물관(2007.3)이 노은동에 등지를 틀었고 ▶이용노미술관(2007.5)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로 대전시립미술관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공간도 탄생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산물 검사소로 더 잘 알려진 등록문화재인 중구 대흥동의 옛 농수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2008.9)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이라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

문화재와 국악과 관련한 시설로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2009.4)과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2009.9)이 개관을 했다. ‘뿌리공원’ 내에 국내 유일의 ▶한국족보박물관(2010.4)이 문을 열었다. 이밖에 오랫동안 더부살이를 했던 ▶서구문화원이 청사를 신축(2010.6) 됐고, 대전문화의 모태가 됐던 ▶중구문화원은 문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흥동으로 이전(2009.2) 했다.

웬만한 시설들은 아쉬운 대로 갖춰진 셈이다. 전국 통계와 비교해도 대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나쁘지 않다. 공연장의 경우 오히려 문화관광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시설 확장보다는 수요관리에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문화기반시설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국악 전용극장 건립과 함께 총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구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류센터’ 건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불과 2년 전에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2009.4) 웃다리 농악전수교육관(2009.9) 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류센터’ 는 인간문화재 및 무형문화재들이 상시 공연을 펼치고 후계자 전수, 대중교육 및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기존의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나 기능 면에서 차별화가 없다. 앞서 문을 연 문화재 관련 시설들도 개관 초기에는 콘텐츠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문화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대전시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충남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이다. 현재 대전시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이라는 큰 틀을 정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기반시설들이 일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들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 건립은 그다음이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산재한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지역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대전시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민간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무조건 새로 짓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적정한지 중복적인 것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 교육, 교통 등등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대전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면 과제이지만 문화격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서구지역에 크고 화려한 기반 시설들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시설을 확충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



#### 4. 원도심 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창작촌 지원

대전의 문화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갑천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문화축과 원도심의 문화축이 그것이다. 신도심의 문화축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지역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민간갤러리, 소극장, 카페 등 작고 오밀조밀한 아날로그적이며 일상적 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지역 불균형 해소,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원도심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구청에서 문화예술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 거리정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구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도심 연극전용 소극장 지원 사례처럼 대전시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우선 원도심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를 제안한다. 대전시가 시 예산으로 원도심 내에 일정 공간을 확보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원도심에 창작공간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다. 창작공간지원이 확대될 경우 원도심은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문화지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도심내에 예술창작촌 지원은 대전처럼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부산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시는 2010년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산 중구 중앙동, 동광동 일대에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포파포가'를 조성, 300여 명이 넘는 작가들이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창작촌을 형성했다.

또한 대구의 경우 중구에 위치한 대구 KT&G 옛 별관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미술가 음악가 엔지니어 등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작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80억 원의 국비를 포함해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도 도심 공동화로 슬럼화된 원도심을 문화를 매개로 다시 살리는 도심 재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구는 산업은행 대구지점을 대구도시공사가 매입해 대구시에 기증 근대역사관으로 만들었다. 2011년 초 개관한 대구 근대역사박물관은 콘텐츠가 빈약해 일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은 대흥동 뽕죽집 사태와 민간에 임대돼 상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대전산업은행의 예와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 하겠지만 공간 재창조와 맞물린 근대문화유산 보호, 관리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5. 시급한 근대문화유산 조례 제정

2010년 10월에 벌어진 대흥동 뽕죽집 무단 철거 사건은 대전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의 반열에 오르거나 지향하는 도시치고 근대의 흔적이 녹아있는 근대문화유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도시가 없다. 특히 최근 스토리텔링이 문화의 중요한 콘텐츠로 떠오르며 많은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은 중요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뽕죽집 무단 철거 사태에서 보듯 대전시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다. 다른 지자체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전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대사동 별당, 원도심의 옛 한국은행 대전지점, 옛 연정국악원,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중앙극장 등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고 산업은행 대전지점 건물을 비롯해 남아있는 근대유산들도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도 맞물려 있다.

지금처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 문화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 군산시 같은 경우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 책정이다. 대전시가 나서서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조만간 대전에서 근대유산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민간 5기를 맞아 대전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와 관련해서도 축제를 비롯해 관광산업 등 많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이어말로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재 정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6. 축제, 관광산업형과 동네축제 두 축으로 추진해야

축제 문제는 계속해서 대전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민선 4기 때도 그랬고 민선 5기에 들어선 현재도 축제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논의의 초점은 대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도시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줄 대표축제가 없다는데 집중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전시는 24년 동안 지속돼온 한밭문화제를 폐지하고 2008년 대전H2O 페스티벌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대신 부각되고 있는 것이 '대전 국제푸드 & 와인 페스티벌'다. 민선 5기 문화관련 공약 사업 첫머리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를 관광축제 기반구축 원년으로 정해 부가가치 높은 명품 관광축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2.23) '돈 버는 관광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기본 목표를 세우고 기반구축, 대전형 명품축제 개발, 2010 국제푸드 & 와인 페스티벌, 계절별 테마축제 개최 등의 단기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가 명품 축제도시 육성을 위해 집중할 테마는 푸드 & 와인 페스티벌, 소믈리에 경기대회 등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의 트렌드인 음식문화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축제 육성이 대전시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축제를 축소하는 경향과 달리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과연 축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실제 효과가

있을지하는 점이다. 물론 대전시는 음식축제가 충분한 생산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축제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술한 비난이 따랐다. 각 지자체들이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축제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처럼 거론됐다. 대전시도 다른 축제는 통폐합을 통해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 '돈이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푸드 & 와인 페스티벌이다. 이는 축제를 철저히 산업적이고 관광 차원에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축제가 관광산업형 축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삶에 스며들어 공동체의 연대감을 갖게 하는 다양한 작은 축제들에 대한 관심도 이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

## 7. 다양한 동네 축제에 대한 관심 가져야

관광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축제가 있다면 한 쪽에는 작은 동네축제도 있다. 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에는 몇몇 실험적인 작은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3회제를 맞은 대흥동립만세도 그 중 하나다. 스스로 진화하는 축제를 모토로 하고 있는 대흥동립만세는 기존의 축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관의 지원에 의존하던 기존 축제와는 달리 우선관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예산지원을 받지 않을뿐더러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대신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과 재기발랄함을 무기로 하고 있다.

대흥동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말해주듯 갤러리 소극장 등 다양한 문화적 공간과 특색 있는 작은 공간들이 많다. 또 젊고 실험적인 문화예술인의 발길도 잦다. 이 같은 인적물적 문화 자원들을 중심으로 대흥동이 갖는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축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자발적인 축제가 아니라 관주도형의 축제인 탓이다. 시민들은 배제된 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해당 단체장의 생색만 냄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흥동립만세와 내용과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취지를 갖고 있는 작은마을축제는 현재 대전지역에도 서너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민동 마을축제와 가양동 시장축제가 대표적이다. 엑스포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민동 축제는 8회째 진행되면서 동네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민동 축제는 주민들이 준비한 노래 연극 등을 발표하는 무대발표 중심으로 꾸며지는 학예회 같은 형식이다. 그래도 준비하면서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주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한다.

지자체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대표축제 육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작은 축제의 육성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 차원에서라도 작은축제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8. 작은 영화관 및 미디어센터 설립

대전시는 원도심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극장 한 곳 당 3년간 1억3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첫해에는 소극장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등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운영비로 3천만 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연습이나 장기공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극단들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창작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한 번 선정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극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간 확보로 소극장을 운영하는 극단들은 자체 기획공연과 대관 공연을 통해 공연활동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연극계에는 단비 같은 일로 소극장 연극뿐만 아니라 지역 연극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까지 원도심의 대흥동 주변에 드림아트홀 등 4개의 소극장을 지원하여 이 지역을 연극소극장의 구역으로 조성하였다.

이 같은 연극전용 소극장 지원의 성과에 견줘 영상미디어 쪽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극전용소극장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상업자본에 매몰되는 문화 환경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며 현장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문화산업 측면에서 영상문화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HD드라마 타운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문화산업적 접근이라면 이의 기초가 되는 작은 다양성 영화 보호도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전 원도심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성영화 전문상영관이 한 곳 있다. 대전 아트 시네마는 상업논리가 앞서는 대형 복합상영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작가주의 예술 영화, 독립영화, 단편영화, 고전영화 등 다양하고 독특한 메뉴들로 밥상을 차려놓고 있어 이웃 도시에서까지 마니아들이 부러움 속에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소극장 연극이 그렇듯 이 다양성영화 상영관 역시 운영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 정도의 도시 규모면 다양성영화 상영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더구나 대전은 최근 드라마타운 조성 등 영화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성영화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문화환경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영화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 예를 들어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화산업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감독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영화관련 전문인력의 산실이 되고 영화 산업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초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이 갖는 힘과 공공적인 성격 때문이다. 영화도 그렇게 바라보자는 것이다. 소극장을 지원하는 것은 소극장이 다양한 연극 실험의 장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영화관도 소극장 지원육성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종합 영상문화 복합공간인 미디어센터 설립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업영화관에서 취급되지 않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공간과 교육센터를 함께 두자는 것이다. 다양한 작은 영화, 예술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영화제작과 이론 교육을 담당하는 영화아카데미,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 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은 소극장 활성화 지원처럼 작은 영화관 지원을 시도하기를 바란다.

## 9. 도시디자인으로 도시를 편하고 아름답게

도시활성화 정책에 포함된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는 대전을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최근 실시된 간판정비 사업이 또 하나의 획일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문화적 접근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시경관기본계획, 대전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을 도시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긴 안목에서의 단계적인 디자인 계획이 요구된다.

## 04. 문화도시는 시간의 켜와 사람들의 숨결로 이뤄져

문화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시간의 켜와 역사적 시간과 장소 속에 뿌리를 내려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이 도시에 녹아들 때 문화의 결, 예술적 향취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곧 한 도시의 품격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화는 수단이 아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콘텐츠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시대다. 특히 대전시의 인구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의 시설 확장이나 외형적인 치장, 기관, 기구 설립은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인문학적 배경 아래 주어지는 가치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이다. 도시마다 앞 다퓌 건립해 놓고 활용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인 타 도시의 기반시설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고도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대전시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긴 호흡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문화도시 대전을 꿈꾸며' (김선미, 대전문화 19호, 2010, 대전시) 중 일부를 수정, 재인용 했음을 밝힌다.